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과 정치신뢰의 함의*

임재영**

문국경***

〈 目 次 〉

I. 서론	IV. 분석결과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V. 결론
III. 연구방법 및 기초통계	

〈요 약〉

지난 10여 년간 복지정책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상급식, 학자금 지원, 기초노령연금, 육아수당 등 복지정책이 사회적 화두로 대두될 때마다, 당파 간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 간 관계를 검증하고, 나아가 이념적으로 반대함에도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정치신뢰에 주목하였다.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데이터 및 순서형 로짓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보수주의자일수록 중도주의자보다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정치신뢰가 높을수록 보수주의자들의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행위자들 특히 진보진영 정치행위자들이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시민들의 정치신뢰도가 증가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복지정책, 당파성, 이념, 이념적 위험, 정치신뢰】

* 본 논문심사과정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힙니다(NRF-2017S1 A3A2065838).

** 주저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커뮤니티웰빙연구센터 전임연구원(jaeyounglim@yahoo.com)

*** 교신저자,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kkmoon@inha.ac.kr)

논문접수일(2019.7.31), 수정일(2019.9.10), 게재확정일(2019.9.18)

I. 서론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복지정책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무현 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법, 이명박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및 무상보육,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상보육·무상교육 확대와 더불어 반값등록금 등 복지정책의 도입과 확대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최병호, 2014). 특히 무상급식과 무상보육과 관련한 대립은 여야를 넘어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이가영, 2014; 정현진, 2016). 복지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점차 당파적 이슈로 변질함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이념적 대립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수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진보주의자들과 비교하여 복지정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이는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화하는 과정의 한국 사회에 큰 정책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한국 사회에서 이미 당파적(partisan)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정치신뢰에 주목하게 되었다.

정치신뢰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서 1960년대 말 베트남전에 대한 반발과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촉발된 탄핵으로 정치신뢰가 끊임없이 추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정치신뢰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뤘으나(Citrin, 1974; Miller, 1974; Hibbing & Theiss-Morse, 2001; Hetherington, 2005), 연구가 진화하면서 정치신뢰와 정책태도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Hetherington, 1998; Hetherington & Rudolph, 2015). 최근에는 이념적 위협 인식과 정치신뢰 간 역학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Brooks & Cheng, 2001; Chanley et al., 2000; Hetherington 1998, 2005; Hetherington & Globetti, 2002; Hetherington & Husser, 2012; Hetherington & Rudolph, 2008; Popp & Rudolph, 2011; Rudolph, 2009; Rudolph & Evans, 2005; Rudolph & Popp, 2009). 특히 후자의 경우 정치신뢰는 아무에게나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특정 정부 정책을 이념적 또는 물질적 위협으로 인식할 때에만 작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복지정책과 같이 진보적 정책으로 간주되는 경우, 진보주의자들은 정치신뢰와 무관하게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신뢰가 작동하지 않는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하지만 보수주의자들의 경우 자신의 이념적 신념에 대치되거나 복지확대를 위해 조세 인상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물질적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에게는 정치신뢰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실제로 기존연구를 보면, 미국의 조세감면 정책이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정치신뢰가 진보주의자들에게 작동하거나(Rudolph, 2009; Rudolph & Popp, 2009), 복지정책 및 흑인지원과 같은 진보정책에 대해 정치신뢰가 보수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발견하였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이러한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담론이 이미 당파적 성격을 띠 것으로 추정하였고, 보수주의자일수록 중도주의자보다 정부의 복지개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낼 것이지만, 정치신뢰가 있을 때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실증하였다. 한국에서 정책에 대한 당파적 입장이 점차 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에 걸쳐 정치적 입장이 양극화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는 정치신뢰가 향후 한국 사회에서 더욱 중대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증하는 데에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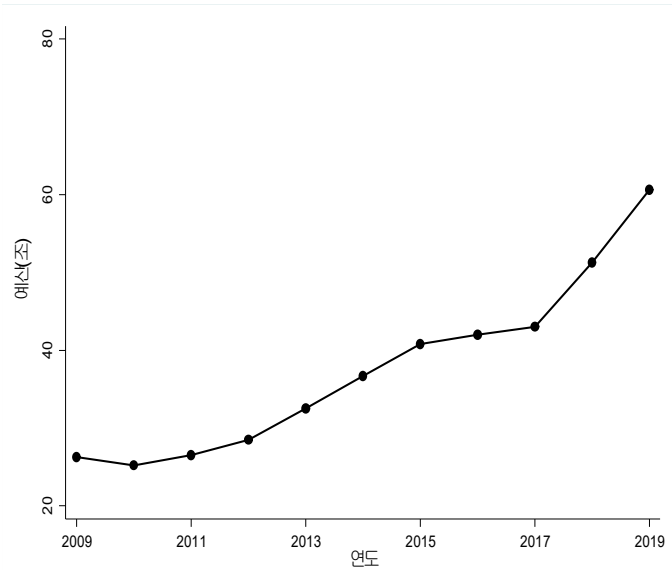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한국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념과 복지인식 간 관계 그리고 정치신뢰와 이념적 위험에 관한 기존연구를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도출하고,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1. 한국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최근 한국의 복지정책은 당파적 이슈로 급변하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보육과 관련한 보수와 진보와 이념적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이가영, 2014; 정현진, 2016). 정부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을 보면 지난 10년간 정부의 복지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정된 재원에서 복지예산이 증가하게 되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당파적 양립이 향후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 정부의 복지예산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2019)를 재구성

복지정책이 정치의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개인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한국학계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¹⁾ 연구의 흐름은 크게 세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인구통계적 특징과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 인식 간 관계를 고찰하는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크게 교육, 연령, 계층/경제수준, 복지수혜집단 등의 설명변수로 개인의 복지정책 인식을 검증하였다. 교육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이고(김희자, 2013a, 2013b; 이지호·황아란, 2016; 이현우·박시남, 2016), 복지인식 수준이 높아짐을(이흥기·박영준, 2015) 실증하였다. 응답자들이 저학력인 경우, 복지확대에 반대하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이지호·황아란, 2016). 계층 및 경제수준도 복지에 대한 인식에 주요 선행변수로 대두되었는데, 계층/계급 수준이 높을수록 복지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김희자, 2013a), 자산이 적을수록 복지정책 확대에 긍정적인 인식을 표출하였다(김윤태·서재욱, 2014; 이지호·황미란, 2016). 이와 반대로 이흥기·박영준(2015)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적 수

1) 복지인식은 “복지 및 그와 관련된 사회 현상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영순·여유진, 2011: 213). 김영순·여유진(2011)은 복지인식과 복지태도를, 전자는 단순한 마음의 표현을, 후자는 행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하지만 두 용어의 구별근거가 모호하고, 실제로 인식이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식과 태도 두 용어를 구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할 것이다.

준이 높으면 진보적인 정치의식을 보이고, 이는 복지인식에 긍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됨을 실증하였다. 김영순·여유진(2011)은 계급과 복지인식 간 관계가 한국에서 비일관성을 나타내고 있고, 이런 점 때문에 한국에서 복지인식이 전체적으로 탈계급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밝혔다. 복지수혜 집단과 복지인식 간 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복지수혜자가 장애인인 경우, 복지인식에 긍정적 인식을 표출하는 점을 실증하였다(류만희·최영, 2009),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복지영역 확대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기도 하고(김희자, 2013a), 복지확대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여(이현우·박시남, 2016) 상반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일부 연구는 이념 또는 정치신뢰와 복지인식 간 관계를 고찰하기도 하였다. 김범수·노정호(2014)는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당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단체장이 민주당 계열인 경우 한나라당 계열에 비해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이 1.7% 늘어나는 점을 실증하였다. 금현섭·백승주(2010)는 종속변수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도로 설정하여 정치적 이념과 정부신뢰의 영향력을 살폈는데,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 보수적일수록 정부의 정책지지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정부신뢰가 이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고은(2016)은 복지지위와 복지인식 간 관계를 고찰하여,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인해 물질적 희생이 증가한 경우 복지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나 정치신뢰가 이를 조절함을 보여주었다.

소득분배 및 세금부담 형평성이 복지인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한나·이미라(2010)는 소득분배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긍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세금부담 형평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책임을 크게 여기는 것을 확인하였다. 손병돈(2016)은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집단 간 복지인식을 검증한 결과, 조세형평성 인식이 높을수록 복지확대를 지지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하는 것을 실증하였다. 금종예·금현섭(2017)은 증세가 언급될 경우 세금부담 인식이 복지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지만, 누진성 조세 선호도와 복지인식 간에는 긍정적 관계가 형성됨을 실증하였다.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적 이념과 정부의 복지개입 인식에 관한 실증적 결과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이 관계를 정치신뢰가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정치권의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일반 시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도 양립화되고 있는지를 실증하고, 나아가 이념과 복지인식 간 관계를 정치신뢰가 조절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념적 성향과 복지인식

복지인식에 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복지인식에 관한 이론적 연결을 시도한 연구는 국내에서 부재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이념적 대립이 2010년대에 급증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고, 이에 따라 일반 시민도 복지에 대한 이념적 대립이 일어날 수 있음을 상정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치권에서의 이념적 갈등이 시민에게 전파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이론적 연결고리는 정치학의 정치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이념적 대립(ideological polarization)을 연구한 여러 학자에 따르면, 특정 이슈에 대한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대립(elite ideological polarization)은 결국 같은 이슈에 대한 대중의 이념적 대립으로 이어지며, 시간상으로 정치권에서 이념적 대립이 먼저 발생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 시민의 이념적 대립(mass ideological polarization)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Hetherington, 2001, 2015; Layman et al., 2006; Baldassarri & Gelman, 2008). 이론적 연결고리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프레임링(framing) 이론인데, 정치권에서 특정 이슈를 어떻게 프레임링 하느냐에 따라 일반 대중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슈에 접근하게 된다. 같은 이슈를 놓고도 정치권에서 어떻게 프레임링하느냐에 따라 이슈를 보는 방향이 갈리게 되는 것이다. 가령 동성애자 가두행진을 두고, 진보진영에서 표현의 자유로 프레임링을 하게 되면, 시민들은 거리행진을 우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 시민의 안전 위협이나 종교적 반대로 동성애자 행진을 묘사하게 되면 시민 역시 부정적 인식으로 행진을 바라볼 가능성이 큰 것이다. 난민입국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프레임링 하는가, 재정 및 치안의 관점에서 프레임링 하는가에 따라 시민의 시각이 바뀌고, 고착화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프레임링의 효과가 큰 이유는 이러한 프레임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Chong & Druckman, 2007; Levendusky, 2010; Druckman et al., 2012; Druckman et al., 2013). 반복적 프레임을 겪는 시민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정치권이 설정한 프레임으로만 접근하게 되고, 이러한 시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화하게 된다(Chong & Druckman, 2007; Levendusky, 2010; Druckman et al., 2012; Druckman et al., 2013). 결국, 타인의 반대주장이 설 자리를 잃게 되고 협소한 시각으로 이슈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파적-이념적 배열(partisan-ideological sorting)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도보수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다면 정치권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보수적 시각이 경화되고, 중도진보적 성향의 사람이라면 진보적 시각으로 더욱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Mason, 2015;

Davis & Dunaway, 2016). 즉 정치권 엘리트의 특정 이슈에 대한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정치권의 프레이밍 및 반복적 프레이밍을 통해 시민들의 당파적-이념적 배열이 가속화되고 결국 특정 이슈에 대해 시민들은 정치권과 같은 태도를 보일 경향이 큰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진보와 보수진영 간 이념적 대립이 격화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도 정치권의 양상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는 정치권의 지속적·반복적 프레이밍 및 언론 보도로 가속화되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의 검색 기능을 사용하여 ‘복지’, ‘정부’, ‘진보’, ‘보수’의 키워드를 동시에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확인한 결과, 2010년 이전까지 10,200여 건의 보도물이 나왔지만, 2011년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9배에 가까운 90,000여 건의 보도물이 양산되었다. 진보진영은 정부의 복지개입을 선호하지만, 보수진영은 정부의 복지개입을 최소화하는 태도를 보여왔다(신현철·우재윤, 2015). 정치권의 보수와 진보진영 프레이밍에 따라 시민의 복지 태도가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진보주의자일수록 중도주의자보다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보일 것이다.

가설 2: 보수주의자일수록 중도주의자보다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일 것이다.

3. 정치신뢰, 이념적·물질적 위협, 복지인식

하지만 이념적 성향만으로 복지인식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고정되는 것인가? 복지에 대한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바뀔 수 있는 기제는 없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치신뢰에 주목하였다. 정치신뢰는 정부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한 시민의 평가적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Hetherington, 1998; Rudolph & Popp, 2009). Hibbing & Theiss-Morse(2001)는 성과만으로 정치신뢰를 측정하는 것은 무리이고, 성과에 이르는 과정도 정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주의의 기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표출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성과로만 본다면 민주주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과정까지 고려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Hetherington & Rudolph, 2015: 34). 한편 정치신뢰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윤리적(probity)인 측면도 포함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Chanley et al., 2000; Hetherington & Rudolph, 2008; Keele, 2007;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지지가 바뀌기 때문이

다. 정치신뢰에 이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정치신뢰가 높을수록 특정 정책에 시민들이 긍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반면 불신이 깊어질수록 정부 정책에 부정적 태도를 표출할 것이다(Rudolph & Popp, 2009).

정치신뢰에 관한 연구는 초기에는 정치신뢰의 선행변수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뤘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분노 및 저항, 민주당 대선 준비상황을 도청하는 데서 촉발된 워터게이트 사건, 유류파동 및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 등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 시민들의 행정부와 의회를 향한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Patterson, 1996, 2005).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학문적 흐름으로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Citrin, 1974; Miller, 1974; Hibbing & Theiss-Morse, 2001; Hetherington, 2005; Hetherington & Rudolph, 2015).

하지만 정치신뢰 연구의 흐름은 곧 정치신뢰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태도에 관한 연구로 진화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 학자들은 정치신뢰, 이념, 그리고 정책태도 간 역관계에 주목하게 되었다. 후자의 연구는 주로 이념적으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특정 정책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고 가정하고 이를 정치신뢰가 조절하는지를 규명하였다. 가령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는 부정적 태도를 진보주의자는 우호적 태도를 보이고, 이와 반대로 조세감면(tax cut) 정책에 대해서는 진보주의자는 부정적 태도를, 보수주의자는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하지만 정치신뢰가 존재한다면, 자신에게 물질적 또는 이념적으로 위협을 주는 정부 정책이라 할지라도 이전에 존재했던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Hetherington, 2005; Popp & Rudolph, 2011; Rudolph & Evans, 2005; Rudolph & Popp, 2009). 즉 정치신뢰는 개인에게 이념적 또는 물질적 위협이 존재할 때만 작동되는 일종의 결정기제(heuristic mechanism)인 것이다(Rudolph & Popp, 2009). 이는 정책에 당파적 성격이 부재하거나, 재분배적(redistributive) 특질이 아닌 배분적(distributive) 특질을 가지는 정책인 경우, 정치신뢰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²⁾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종속변수가 흑인 대상의 재분배 복지정책일 때 보수주의자에게 정치신뢰가 작동함이 실증되었고(Hetherington & Globetti, 2002; Hetherington, 2005), 종속변수가 조세감면이나(부시정부에서 한때 추진되었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민영화 정책일 때 진보주의

2) Lowi(1964)는 개인의 위협인식에 따라 배분적 정책과 재분배적 정책을 구분하였다. 즉 사람들이 특정 집단이나 지역에 배분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분노를 느끼지 않지만, 복지와 같이 A 집단에서 세금을 징수하여 B 집단으로 소득이 재분배될 때 분노를 느끼며 이를 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재분배적 정책은 정책에 수혜에 따라 '승자'와 '패자'로 갈리게 된다(Lowi, 1964, pp. 691-693).

자에게 정치신뢰의 조절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Rudolph, 2009; Rudolph & Popp, 2009). 전자의 경우 진보주의자에게, 후자의 경우 보수주의자에게 정치신뢰의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치신뢰가 없어도 해당 정책을 지지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정치신뢰 대신 정부신뢰의 용어로, 보수적 정치신념이 정부의 정책지지에는 상대적으로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정부신뢰가 있을 경우 두 변수 간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실증하였다(김종예·김현섭, 2017). 또한, 물질적 희생이 존재하는 경우 복지정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지만, 정치신뢰가 이러한 인식을 완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최고은, 2016).

기술된 바와 같이 한국의 복지정책은 상당히 당파성이 짙은 정책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당파적 갈등이 지속해서 그리고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큼을 함의한다. 이미 보수주의자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에 대해 진보주의자와 비교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보수주의자들에게 정부의 복지개입이 이미 이념적 또는 물질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적 위협의 경우 새로운 복지정책의 시행 또는 기존의 복지정책 확대로 조세 인상과 같은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보수주의자는 중도주의자와 비교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정치신뢰가 보수주의자와 정부의 복지개입 간 관계를 조절하여,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완화될 가능성 또한 크다. 한편 진보주의자들에게 정치신뢰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신뢰와는 무관하게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 정치신뢰와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개인 인식 간 관계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4: 정치신뢰가 보수주의자와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개인 인식 간 부정적 관계를 완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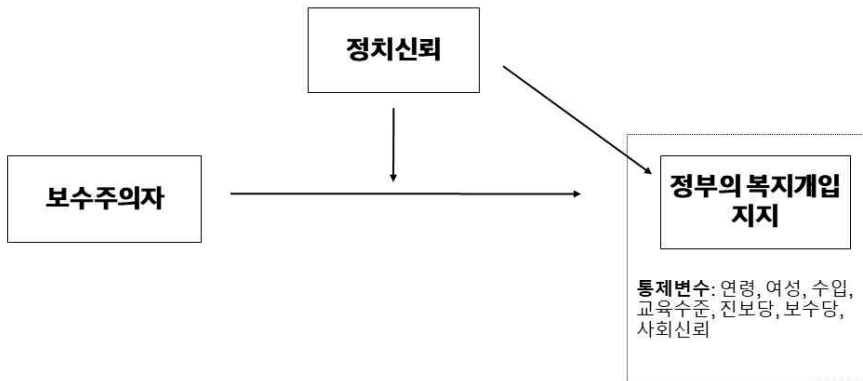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및 기초통계

1. 연구의 분석 틀

기술된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보수주의자일수록 중도주의자와 비교하여 정부의 복지개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하였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하지만

정치신뢰가 보수주의자와 정부의 복지개입 간 관계를 조절하여, 정치신뢰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복지개입에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가정하였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하지만 진보주의자의 경우, 정치신뢰와 상관없이 정부의 복지개입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신뢰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그림 2〉 연구의 분석 틀



2. 표본과 자료수집

기술된 4개의 가설을 실증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수행한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활용하였다. 미국의 시카고대학교 NORC에서 1972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General Social Survey(GSS)를 본떴으며, GSS와 마찬가지로 핵심질문이 반복적으로 매해 조사에 포함된다. 약 140여 개의 정치·경제·사회 문항들이 매 조사에 반복적으로 구성된다(김지범 외,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는 2003년부터 수행되었으며,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2018년 자료까지 제공된 상태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해 제공되었으나, 2014년 이후에는 격년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지범 외, 2019). 자료의 모집단은 18세 이상의 성인남녀이며, 다단계지역확률표집(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에 기반하여 표본을 추출하다(김지범 외, 2019). 구체적인 표본추출은 총 네 가지 단계로 진행되는데, 동/읍/면 단위로 인구비례확률을 통해 무작위로 표집한 뒤, 통/반/리로 표집단위 추출이 진행되며, 이어 가구를 무작위로 추출하고 그중 가구원이 최종 선정된다(김지범 외, 2019). 최종 선정된 가구원에 대해서는 대면면접을 통한 현지 조사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는 조사원기입방식(interviewer-administration)이 추

천되지만 자기기입방식(self-administration)도 허락한다(김지범 외, 2019). 2012년을 제외하고, 2003~2014년은 가중치가 제공되지 않았으나, 2016년 처음으로 모든 연도에 적용 가능한 가중치가 제공되었다(김지범 외, 2019).

2014년 응답자 수는 1,370명이며, 응답률은 55%이다. 응답자 수는 1,370이나 실제 모형에 쓰인 응답자 수는 770명(모형1), 768명(모형2), 768명(모형)이다. 응답자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이유로는, 개인소득 응답자의 587명이 무응답이 아닌 ‘비해당’으로 분류되어 다른 값으로 대체하지 않았고, 따라서 모형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변수에서 극히 낮은 비율로 결측치가 발견되었다. 즉 이념(6), 정치신뢰(17), 지지정당(9) 등에서 결측치가 발견되었다.

〈표 1〉은 이념과 정부의 복지개입 간 교차표를 보여준다. 진보주의자의 경우, 정부의 복지개입에 ‘강력 지지’(종속변수=5)를 보내는 비율이 23.47%로, 보수주의자들의 15.35%에 비해 8.12% 높았다. ‘지지’(종속변수=4)의 경우 역시 진보주의자의 비율이 보수주의자보다 3.28% 높았다.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 모두 정부의 복지개입에 중도적 태도(종속변수=3)를 보이는 비율은 비슷했다. 반면, 보수주의자의 경우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반대’(종속변수=2) 비율이 진보주의자보다 8.86% 더 높았고, ‘강력 반대’(종속변수=1) 역시 진보주의자보다 1.32% 더 높았다. 두 이념 모두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반대보다는 지지를 선호하였으나, ‘지지’나 ‘강력지지’는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보다 11.4% 더 많았고, ‘반대’나 ‘강력 반대’는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보다 10.18% 더 많았다.

〈표 1〉 이념과 정부의 복지개입

정부의 복지개입(값)	진보(N=294)		비교	보수(N=254)	
1(강력 반대)	3.40%	10	<	4.72%	12
2(반대)	11.22%	33	<	20.08%	51
3(중도)	30.27%	89	≐	31.50%	80
4(지지)	31.63%	93	>	28.35%	72
5(강력 지지)	23.47%	69	>	15.35%	39

3. 변수설명 및 측정

먼저 종속변수인 ‘정부의 복지개입 지지’는 정부의 복지 책임에 관한 설문문항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원래의 설문문항 값은 10에 가까우면 ‘자신이 각자의 생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에, 1에 가까우면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에 가깝도록 구성

되어 있다. 역코딩을 하여, 10에 가까우면 정부의 역할이, 1에 가까우면 개인의 책임이 커지도록 하였다. 변수의 값이 서수이기 때문에, 순서형 로짓을 사용하였다(Long, 1997). 다만 값이 1~10에 이르러, 절삭점(cutpoints)이 많아서 이를 1~5로 재코딩하였다. 즉 9~10은 5, 7~8은 4, 5~6은 3, 3~4는 2, 1~2는 1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모형에 포함된 종속변수의 범위는 1~5의 서수로 구성되었다.³⁾

모형에 포함된 주요 설명변수는 이념과 정치신뢰 그리고 이념과 정치신뢰의 상호작용 항이다. 이념은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을 3개의 더미변수인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중도주의자’로 재구성하였고, ‘중도주의자’는 모형에 생략되었다. 진보주의자일수록 중도주의자보다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일 것이지만, 보수주의자일수록 중도주의자보다 정부의 복지개입에 부정적 인식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정치신뢰의 경우, 사회의 주요기관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타진하는 다섯 개의 문항을 하나의 변수로 구성하였다.⁴⁾ 설문 문항의 타당성 및 신뢰성 파악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anatory factor analysis)과 Cronbach’s α 를 검증하였다. <표 2>는 정치신뢰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과 신뢰도를 보여준다. 대법원의 경우 정치신뢰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국에서 시민들은 대법원을 위시한 각종 법치기관을 다분히 정치적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고한솔·최우리·장예지, 2019), 대법원 신뢰에 대한 요인적재량(0.63)은 이를 일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3) 종속변수의 값이 1~10일 때와 1~5일 때의 모형의 결과 값은, 설명변수의 경우 유의미도와 계수 값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값이 1~10일 때는, 연령이 0.1 수준에서 정부의 복지개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진보당 선호의 경우 0.1 수준에 약간 못 미쳐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자세한 결과는 표4 참조).

4) 정치신뢰의 척도로는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의 “How much of the time do you think you can trust the government in Washington do what is right”이 대표적인데, 대통령이나 의회 등의 특정기관을 지정하지 않아 척도의 모호함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Citrin & Stoker, 2018). 본 연구는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 정부, 국회, 대법원, 청와대 등 국내 5개 주요 기관을 고려한 척도를 사용하여, 정치신뢰 척도의 정확성을 보다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척도는 정치신뢰에 정의 측면에서, ‘과정’(process)이나 ‘윤리성’(probity) 측면보다는 ‘성과’(performance)에 기반한 척도라고 볼 수 있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Rudolph & Popp, 2009; Hetherington & Rudolph, 2015).

〈표 2〉 정치신뢰 요인분석과 신뢰도

변수	설문문항	요인적재량	신뢰도	
정치신뢰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귀하는 이 기관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 정부 부처	0.83	0.79
		지방 자치 정부	0.78	
		국회	0.71	
		대법원	0.63	
		청와대	0.74	

주) 개별문항을 모두 역코딩하였음

분석결과 모든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결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ronbach's α 값이 0.79로 나타나, 설문문항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기준값인 0.7을 상회하여, 변수의 신뢰성 역시 검증되었다. 정치신뢰 변수에 구성된 각 설문 문항은 1~3점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역코딩을 하여 값이 3이면 매우 신뢰, 값이 1이면 불신으로 구성되도록 하였고, 개별 값을 모두 더한 다음 5로 나누었다. 본 연구의 핵심인 정치신뢰의 조절 효과는 정치신뢰와 진보주의자(정치신뢰 x 진보주의자) 간 그리고 정치신뢰와 보수주의자(정치신뢰 x 보수주의자) 간 상호작용항으로 구성하였다. 진보주의자의 경우, 정치신뢰와 관계없이 정부의 복지정책 개입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신뢰의 조절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보수주의자의 경우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정치신뢰로 완화될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하였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금현섭·백승주, 2010).

이외에도 통제변수로 지지정당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지지정당 또는 정당일체(party identification)는 개인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정책태도 관련 연구에서 정량적 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udolph & Popp, 2009).⁵⁾ 2014년 정당 구성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보수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을 지지하면 진보당으로 터미변수를 구성하였다(김범수·노정호, 2014). 기타 통제변수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연령, 여성(터미변수), 개인소득, 교육수준 등을 모형에 포함하였다(Galston, 2001; Barkan, 2004; Lewis, 2006; Brooks 2001, 2003, 2004; 김영순·여유진, 2011; 김희자, 2013a, 2013b; 김윤태·서재욱, 2014; 이흥기·박영준, 2015; 이지호·황아란, 2016; 이현우·박시남, 2016; 손병돈, 2016).⁶⁾ 마지막으로 분석모형에 사

5) 진보주의자와 진보당 지지와의 상관관계는 0.277, 보수주의자와 보수당지지 간 상관관계는 0.334로 이념과 지지정당 간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았다. 이는 지지정당을 모형에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다(Rudolph & Popp, 2009).

6) 인종의 경우 미국과 같은 다인종 사회에서는 인종갈등이 심하므로, 정책태도 관련 모형에 포함되지

회신뢰를 고려하였다. 사회신뢰가 높을수록 정부의 소득 및 재분배정책에 긍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다(Bjørnskov & Svendsen, 2013).

4. 기초통계 분석

〈표 3〉은 모형에 포함된 각 변수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보여준다. 기초통계는 모형 3에 기반하였다. 총 관측치는 768개이다.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구성된 변수로는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진보당, 보수당, 여성 등이다. 종속변수의 원 변수는 1~10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절삭점(cutpoints) 수가 많아 1~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각주 3 참조). 서수로 구성되어, 통계방법으로 순서형 로짓을 활용하였다. 7) 모형에 포함된 응답자의 연령은 18~83세로 젊은 층과 고령층이 망라되어 있다. 복지지의 평균값은 3.49로 평균을 상회하여, 응답자의 정부 복지개입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다. 또한, 진보주의자가 38%, 보수주의자가 33%, 여성이 42%로 파악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념적 성향은 진보주의자가 높았으나, 지지정당으로는 진보당(29%)보다 보수당(30%)에 더 정당일체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신뢰는 0~10 사이의 평균에 근접한 4.99로 나타나, 사회신뢰가 딱히 높지도 낮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신뢰는 1~3 사이의 평균값인 2에 못 미치는 1.51로 나타나 주요 정치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Hetherington, 2005; Hetherington & Rudolph, 2015; Gilens, 1996), 한국의 경우 아직 인종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고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 7) 순서형 로짓을 쓸 경우, 절삭점(cutpoints) 간 즉 종속변수 값 간 거리가 균일해야 하는 평행선가정(parallel regression assumption)이 충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모형이 이러한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Stata 버전 14에서 제공되는 brant 테스트와 omodel 테스트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Wolfe, 1997; Long & Freese, 2014). 두 테스트 모두 종속변수 값 중 두 값을 기준으로 개별 모형을 구성한다. 즉 본 연구의 모형의 경우 1과 2, 1과 3, 1과 4 그리고 1과 5일 때의 네 개의 모형으로 구분하여 각 변수의 계수 값이 모형에 걸쳐 균일한지를 검증하는 테스트인데, brant 테스트의 결괏값은 $\chi^2 = 40.94$, omodel 테스트의 결과 값은 $\chi^2 = 46.50$ 로 나타났으며, 평행성 가정을 본 연구 모형이 위반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Williams(2010)는 평행선 가정이 위반되었을 때, 그 대안으로 순서형 일반화 로짓(ordered generalized logit model)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델은 평행선 가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모형의 계수와 표준오차를 측정한다. 이 방법을 사용한 결괏값이 순서형 로짓을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와 계수 값 및 강건표준오차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록 평행선 가정을 위반하였지만, 결과 값이 변화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짓을 사용하여 모형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평행선 가정이 위반되더라도 결괏값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Williams(2016)는 주장하였으며, 종속변수 값을 재구성하여 순서형 로짓을 종속변수 값이 0과 1로 구분되는 로짓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나 종속변수 값의 변이(variations)가 이 과정에서 소실되는 단점도 존재한다(Fullerton & Dixon, 2010).

〈표 3〉 기초통계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복지지지	768	3.49	1.08	1	5
진보주의자	768	0.38	0.49	0	1
보수주의자	768	0.33	0.47	0	1
정치신뢰	768	1.51	0.45	1	3
진보당	768	0.29	0.45	0	1
보수당	768	0.30	0.46	0	1
연령	768	44.99	13.11	18	83
여성	768	0.42	0.49	0	1
수입	768	6.46	4.24	0	21
교육수준	768	4.00	1.39	0	7
사회신뢰	768	4.99	2.02	0	10

IV. 분석결과

1.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기술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제변수의 효과, 주요설명변수의 효과, 조절효과를 차례로 확인할 수 있는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통계방법은 기술한 바와 같이 순서형 로짓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모형 1은 통제변수 및 조절변수가 정부의 복지개입 지지에 대한 영향을, 모형 2는 이념이 정부의 복지개입 지지에 끼치는 주효과를 보여준다. 모형 3은 본 연구의 전체모형(full model)으로, 정치신뢰가 이념과 정부의 복지개입 지지 간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모형 1은 통제변수와 조절변수가 정부의 복지개입 지지에 끼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로는 지지정당을 나타내는 변수 2개만이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진보당을 지지하는 경우($\beta=0.31$, $p<0.10$), 정부의 복지개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응답자가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우($\beta=-0.55$, $p<0.01$), 정부의 복지개입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진보당보다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우의 계수 값이 더 컸으며, 유의미 수준 또한 0.01로 더 높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모형 2는 주요 설명변수인 이념이 정부의 복지개입 지지에 끼치는 효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념은 정부의 복지개입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다만 모형 1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수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 정부의 복지개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회귀계수(β)의 규모(-0.45, $p<0.05$) 역시, 다른 변수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3은 본 연구의 핵심인 조절효과를 보여주며, 조절변수와 설명변수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모형(full model)이다. 특히 상호작용항(진보주의자 x 정치신뢰, 보수주의자 x 정치신뢰)을 통해서 정치신뢰가 이념 특히 보수주의자와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먼저 통제변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진보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일수록($\beta=0.30$, $p<0.10$), 정부의 복지개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보수당과 일체감을 드러내는 응답자일수록, 정부의 복지개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진보당 지지보다 회귀계수(β)의 규모가 더 컸다($|-0.43| > |0.30|$). 주요설명변수로는 보수주의자($\beta=-1.62$, $p<0.05$)일수록 중도주의자와 비교하여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 가설 2가 채택되었다. 진보주의자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가설 1은 기각되었다. 이는 보수주의자의 경우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만, 진보주의자의 경우 중도주의자와 비교하여 복지개입에 대한 강한 긍정적 지지가 2014년을 기준으로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핵심질문은 과연 정치신뢰가 한국사회에서 이념과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태도 간 관계를 조절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기술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치신뢰는 아무 때나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해 개인이 이념적 또는 물질적 위협을 느꼈을 때 작동한다. 따라서 보수주의자가 정부의 복지개입을 이념적 또는 물질적 위협으로 인식한다면, 정치신뢰가 작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진보주의자의 경우, 정치신뢰가 부족하더라도 이에 상관없이 복지정책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신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실증결과였다. 모형 3을 통해서, 이러한 가정이 한국에서 현실로 다가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정부의 복지정책이 이미 당파적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수주의자일수록 이러한 정부의 복지개입에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beta=-1.62$, $p<0.05$), 정치신뢰가 높아지면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ta=0.85$, $p<0.05$). 따라서 가설 4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정치신뢰와 정부의 복지개입 간 직접적 관계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가설 3은 기각되었다.

무엇보다 진보주의자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자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 간 관계에 비해 진보주의자는

복지에 대해 이에 대치되는 인식을 보여주지 않았다.

〈표 4〉 복지정책의 정부개입 지지에 대한 순서형 로짓 결과

	모형1 (통제변수 및 조절변수)		모형2 (주효과)		모형3 (전체모형/조절효과)	
	β	S.E.	β	S.E.	β	S.E.
정치신뢰	-0.10	0.18	-0.10	0.19	-0.44	0.36
진보주의자			0.00	0.18	0.04	0.71
보수주의자			-0.28	0.20	-1.62	0.72**
진보주의자 X 정치신뢰					-0.04	0.44
보수주의자 X 정치신뢰					0.85	0.43**
진보당	0.31	0.17*	0.28	0.19	0.30	0.17*
보수당	-0.55	0.18***	-0.45	0.19**	-0.43	0.19**
연령	-0.01	0.01	-0.01	0.01	-0.01	0.01
여성	0.08	0.15	0.08	0.15	0.08	0.15
수입	-0.02	0.02	-0.01	0.02	-0.01	0.02
교육수준	-0.01	0.06	-0.00	0.06	-0.03	0.07
사회신뢰	-0.05	0.04	-0.04	0.05	-0.04	0.05
τ^1	-4.29	0.56	-4.24	0.57	-4.92	0.79
τ^2	-2.52	0.52	-2.47	0.53	-3.14	0.74
τ^3	-1.02	0.50	-0.97	0.51	-1.62	0.73
τ^4	0.52	0.50	0.58	0.52	-0.06	0.73
로그가능도	-1107.19		-1102.13		-1097.80	
χ^2	33.96***		42.00***		45.45***	
N	770		768		768	

주: * p<0.10, ** p<0.05, *** p<0.01

2.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종속변수=5) 시, 각 변수의 예측확률

〈표 5〉는 응답자들이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강력을 지지를 표명했을 경우(종속변수 값이 5일 때) 각 변수의 예측확률(predicted probabilities)값을 보여준다. 특히 각 변수의 최솟값과 최댓값일 때 ‘강력한 지지’에 대한 확률값을 파악함으로써, 확률 값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개별 최솟값과 최댓값을 설정할 때, 나머지 변수들의 값은 평균값으로 고정하였다. 보수주의자의 경우 정치신뢰도가 최솟값(정치신뢰=1)일 때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율은 12%에 머물렀으나, 정치신뢰도가 최댓값(정치신뢰=3)일

때 ‘강력한’ 지지율은 23.07%로 증가하여 정치신뢰의 변화에 따라 지지율이 11.07%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진보주의자의 경우, 지지율이 정치신뢰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감소(-4.9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⁹⁾ 기타 변수 중, 변수 값이 최솟값에서 최댓값으로 변화함에 따라 ‘강력한 지지’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여성일 경우(1.14%)와 진보당(4.48%) 두 변수에 불과했다.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복지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미미하게나마 증가하였다. 진보당 지지자의 경우 비진보당 지지자보다 정부의 강력한 복지개입에 대한 지지가 4.4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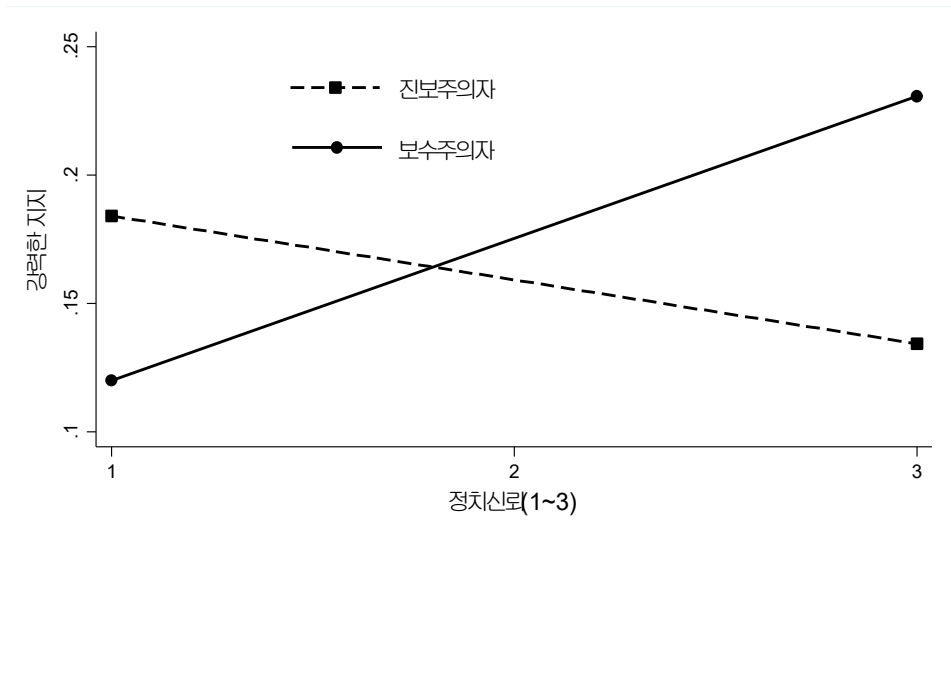
다수의 변수가 변수값이 변화함에 따라 오히려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변수로는 연령을 들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만,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지지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실제 정책수요와 개인적 선호도 간 모순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당을 지지하는 경우, 비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에 비해, 지지율이 5.79%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입과 교육수준은 각 값이 최소에서 최대로 바뀔 경우,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 즉 수입이 늘어나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함을 보여준다. <그림 3>은 <표 5>의 정치신뢰에 따른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정부 복지개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변화를 도식화한 것이다.

-
- 8) 진보주의자의 경우 정치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4.98%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주의자의 경우, 정치신뢰도가 오히려 정부의 복지개입 지지에 대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정치신뢰도가 높을수록, 정부가 국민의 지지 없이도 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표 4>에서 나타났듯이, 진보주의자에게는 정치신뢰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부른 예단은 본 연구의 모형으로는 개진하기가 어렵다.
- 9) 정치신뢰도가 최솟값에서 최댓값으로 변할 경우, 중도주의자의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22.79%에서 10.90%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주의자의 경우,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이념적·물질적 위협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치신뢰도가 긍정적 조절효과를 가질 확률이 낮다. 다만 정치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복지개입에 대한 지지율이 11.89% 정도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중도주의자의 경우 정치신뢰도가 높아질 때 정부가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개인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중도주의자가 본 연구의 주된 연구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중도주의자의 이념적 성향과 정부정책 간 관계 및 정치신뢰의 조절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념과 정치신뢰 그리고 정책태도 간 관계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종속변수=5)에 대한 예측확률

정치신뢰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최솟값	최댓값	차이
진보주의자	18.41%	13.43%	-4.98%
보수주의자	12.00%	23.07%	11.07%
정치신뢰	18.44%	14.04%	-4.4%
진보당	16.07%	20.55%	4.48%
보수당	19.26%	13.47%	-5.79%
연령	21.44%	12.71%	-8.73%
여성	16.79%	17.93%	1.14%
수입	18.23%	15.17%	-3.06%
교육수준	18.72%	16.13%	-2.59%
사회신뢰	20.29%	14.54%	-5.75%

〈그림 3〉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종속변수=5) 시, 정치적 이념과 정치신뢰 간 관계



V. 결론

정부의 복지예산이 이미 지난 10여 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기획재정부, 2019). 복지국가로 진화함에 따라 정부의 복지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방준호, 2018). 시민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최병호, 2014), 정부의 복지부담은 사면초가에 내몰린 셈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정된 재원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정부는 증세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에 대한 정치권의 이념적 대립이 지난 10여 년간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복지에 대한 이념적 대립이 일반 시민에게서도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치신뢰에 주목하였다. 순서형 로짓을 활용하여 모형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는 최소한 보수주의자들에게 정부의 복지개입이 당파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보주의자의 경우, 중도주의자와 비교해서 복지에 대한 이념적 성향이 차별적으로 표출되지는 않았다. 보수주의자들은 정부의 복지개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정치신뢰가 높으면 이러한 인식이 희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주의자의 경우 정치신뢰와 상관없이 정부의 복지개입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정치신뢰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념적 희생과 정치신뢰 간 역학관계에 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치신뢰는 이념적 희생이 큰 개인에게만 작동한다(Hetherington, 2005; Hetherington & Rudolph, 2015). 따라서 진보주의자는 정치신뢰와 상관없이, 정부의 복지개입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신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보수주의자들부터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신뢰가 필요할 정도로, 보수주의자는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이념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시점에 한국이 이미 다다랐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진보주의자들의 경우,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당파적 색깔을 아직은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는 중도주의자와 진보주의자 간 이념적 성향이 뚜렷이 갈리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서는 진보주의자와 중도주의자 대 보수주의자로 이념적 대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형 3(전체모형)에서는 진보당 지지자일수록 정부의 복지개입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보수의 경우,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 개인의 이념과 지지정당이 합치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진보의 경우 개인의 이념적 성향이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에 비해 아직은 당파적 특질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만 정치엘리트의 이념적 성향을 따라 당파적-이념적 배열(partisan-ideological sorting)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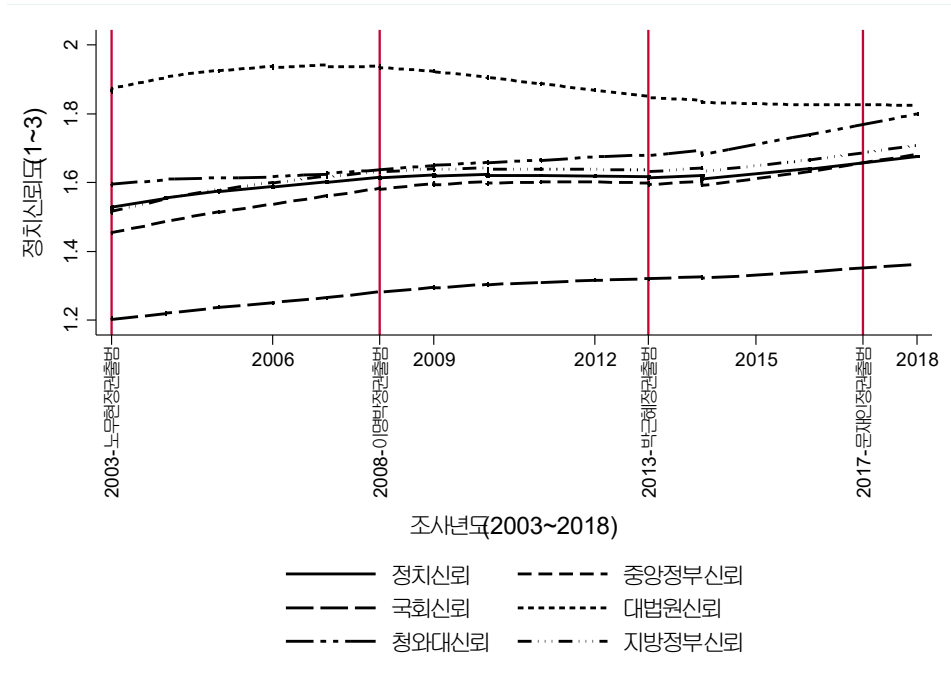
되고 있고, 진보주의자는 아직 배열이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치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 실증하였지만, 실제로 정치신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정치신뢰는 국가안보와 같은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 프라이밍(priming) 기법을 이용한 서베이 실험에서 응답자들이 국가의 위협과 같은 안보·군사적 대치 상황에 사전에 노출될 때 정치신뢰가 급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Hetherington & Husser, 2012; Hetherington & Rudolph, 2015). 실제로 한 연구는 냉전 이후 정치신뢰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제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Hetherington & Husser, 2012). 구소련과의 대치과정에서 미국이 정치신뢰가 상당히 높았던 것은 국가 위기상황에 시민이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Hetherington & Husser, 2012).

무엇보다 정치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 중 하나가 의회에 대한 시민의 지지이다(Hetherington & Rudolph, 2015). 아무리 대통령 혼자서 정치신뢰 회복에 노력하든, 국회 및 국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정치신뢰도를 끌어올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Mayhew(1974)에 따르면 정치인들의 최우선순위는 다음 재선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단기적 정쟁에 정치인들의 시선이 고정된 현실에서, 장기적 시각으로 그것도 집단적 의지와 노력으로 시민들의 정치 신뢰도를 끌어올리리라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정치신뢰가 일시에 외부적 요인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자연재해나 외부의 습격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는 일시적이지만 급격한 정치신뢰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경우 911 재난이 터진 후, 정치신뢰가 상승하였고 부시 정부에서는 ‘아동 낙오 방지법’(NCLB: No Child Left Behind)이나 노령 시민을 대상으로 처방 약값의 정부 보장을 확대한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Medicare Prescription Drug Modernization Act)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Miller Center of Public Affairs, 2019). 이처럼 일시적으로 정치신뢰가 상승하는 경우, 정치행위자들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권 초기 대통령의 행보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허니문 기간을 최대한 정책추구에 이용해야 한다. 특히 진보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정치행위자일수록 복지와 같은 진보적 정책을 추진할 때, 보수주의자들의 정치신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을 추구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한국인의 정치신뢰(2003~2018)



주: 김지범 외(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행히도 한국인의 정치신뢰는 대법원 신뢰를 제외하고는 2003~2018년을 기준으로, 미세하나마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전반적으로 정치신뢰를 구성하는 다섯 개 주요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신뢰(1~3)의 평균 이하에서 머무르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신뢰의 선행변수 중 중요한 변수로 꼽히는 입법기관(Hetherington & Rudolph, 2015)에 대한 신뢰가 신뢰 척도의 최저점인 1에 가깝다. 이는 국회 자체의 노력이 있지 않은 한, 전반적인 정치신뢰가 큰 폭으로 오르는 쉽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 또한, 청와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국회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향후 정치신뢰가 일시적으로라도 상승하는 경우, 정치신뢰를 활용한 정책추진에서 청와대를 위시한 행정부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정책추진이 좀 더 쉬울 수 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한가지 고무적인 점은 정치신뢰가 미세하게나마 15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치신뢰가 오를 여지가 아직도 많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정치신뢰가 실제 정부 정책에 주는 합의 또한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먼저 패널데이터가 아닌 2014

년 단년도 횡단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과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개인 인식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모형은 교육수준(김희자, 2013a, 2013b; 이지호·황아란, 2016; 이현우·박시남, 2016), 연령, 계층/계급(김희자, 2013a), 소득 수준(김윤태·서재욱, 2014; 이지호·황아란, 2016; 김영순·여유진, 2011) 등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재현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인구통계학적 변수의 중요성도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수 있음을 제기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개인의 인식 일부분을 건드렸을 뿐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둘러싼 담론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향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연령별 이념적 대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령, 개인의 이념적 성향 그리고 복지정책 인식 간 관계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한솔·최우리·장예지. (2019. 5. 9). 대법, 사법농단 법관 무더기 면죄부, 명단도 공개안해.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93291.html.에서 2019. 6. 25 인출.
- 금종예·금현섭. (2017). 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세금부담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1(1): 1-29.
- 금현섭·백승주. (2010).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행정논총」, 48(4): 201-228.
- 기획재정부. (2019). 연도별 예산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9dptj 2019. 6. 21 인출.
- 김윤태. 서재욱. (2014). 한국의 복지태도와 복지제도- 개별 복지제도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태도. 「동향과 전망」, 331-378.
- 김지범·강정환·김석호·김창환·박원호·이윤석, 등. (2019).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8.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http://kgss.skku.edu/?page_id=41.에서 2019. 5. 10 인출.
- 김범수·노정호. (2014).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8(2): 57-78.
- 김영순·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11-240.

- 김희자. (2013a). 계급, 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20(2), pp.35-68.
- 김희자. (2013b).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서언론」, 16: 59-88.
- 류만희·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1): 191-210.
- 방준호. (2018. 8. 27). '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일본보다 7년 빨라.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9471.html. 에서 2019년 6월 5 인출.
- 손병돈. (2016). 집단간 복지태도의 차이 결정요인: 복지확대 및 증세에 대한 찬성·반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4): 005-034.
- 신현철·우제윤. (2015. 2. 4). 與 “복지 구조조정이 먼저”...野 “복지 늘리고 부자증세.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5/02/117172>에서 2019년 6월 5 인출.
- 이가영. (2014. 11. 8). [현장에서] 보수복지·진보복지 따로 없는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6359634>.에서 2019. 6. 5 인출.
- 이지호·황아란. (2016). 복지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복지수준과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257-285.
- 이한나·이미라. (2010). 한국인의 복지태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형평성 지각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0(2): 254-286.
- 이흥기·박영준. (2015).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치태도와 교육수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48: 362-397.
- 이현우·박시남. (2016).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결정요인 분석- 개인이익을 넘어서. 「Oughtopia」, 31(1): 267-298.
- 정현진. (2016. 1. 20). [시사 NIE] 차별없는 복지 vs 맞춤형 복지.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19440747>.에서 2019. 6. 5 인출.
- 최고은. (2016).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부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3(1): 125-150.
- 최병호. (2014).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예산정책연구」, 3(1): 89-129.
- Baldassarri, D., & Gelman, A. (2008). Partisans without constraint: Political polarization and trends in American public opin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4(2): 408-446.
- Barkan, S. (2004). Explaining public support for the environmental movement: A civic voluntarism model. *Social Science Quarterly*, 85: 913-937.
- Bjørnskov, C., & Svendsen, G. T. (2013). Does social trust determine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Evidence using historical identification. *Public Choice*, 157(1/2): 269-286.
- Brooks, A. C. (2001). Who opposes government arts funding? *Public Choice*, 108: 355-367.
- Brooks, A. C. (2003). Public opinion and the role of government arts funding in Spain.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5: 29-38.

- Brooks, A. C. (2004), In search of true public arts support. *Public Budgeting & Finance*, 24: 88-100.
- Brooks, C., & Cheng, S. (2001), Declining government confidence and policy preferences in the U.S.: Devolution, regime effects, or symbolic change? *Social Forces*, 79(4): 1343-1375.
- Chanley, V., Rudolph, T., & Rahn, W.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Public Opinion Quarterly*, 64: 239- 56.
- Chong, D., & Druckman, J. N. (2007). Framing theor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103-126.
- Citrin, J.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973-88.
- Citrin, J., & Stoker, L. (2018). Political trust in a cynical ag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1: 49-70.
- Davis, N. T., & Dunaway, J. L. (2016). Party polarization, media choice, and mass partisan-ideological sorting? *Public Opinion Quarterly*, 80(S1): 272-297.
- Druckman, J. N, Fein, J., & Leeper, T. J. (2012). A source of bias in public opinion stabil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6(2): 430-454.
- Druckman, J. N, Peterson, E., & Slothuus, R. (2013). How elite partisan polarization affects public opinion form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7(1): 57-79.
- Fullerton, A., & Dixon, J. (2010), Generational conflict or methodological artifact? Re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policy attitudes in the U.S., 1984-2008, *Public Opinion Quarterly*, 74: 643-673.
- Galston, W. (2001).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ngagement, and civic educ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 217-234.
- Gilens, M. (1996). "Race Coding" and white opposition to welfar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0: 593-604.
- Hetherington, M. J.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 791-808.
- Hetherington, M. J. (2001). Resurgent mass partisanship: The role of elite polariz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3): 619-631.
- Hetherington, M. J., & Globetti, S. (2002). Political trust and ra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 253-75.
- Hetherington, M. J. (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 Hetherington, M. J., & Rudolph, T. (2008). Priming, performance, and the dynamics of political trust. *The Journal of Politics*, 70: 498-512.
- Hetherington, M. J., & Husser, J. (2012). How trust matters: The changing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6: 312-325.
- Hetherington, M. J., & Rudolph, T. (2015). *Why Washington won't work*.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Hibbing, J., & Theiss-Morse, E. (Ed). (2001).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 Keele, L. J. (2007). Social capital, government performance, and the dynamics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2): 241-254.
- Layman, G. C, Carsey, T. M., & Horowitz, J. M. (2006). Party polarization in American politics: Characteristics, causes, and consequen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9: 83-110.
- Levendusky, M. S. (2010). Clearer cues, more consistent voters: A benefit of elite polarization. *Political Behavior*, 32: 111-131.
- Lewis, G. B. (2006). Public spending on the arts as morality policy: The structure of public attitudes. *The Policy Studies Journal*, 34: 131-138.
- Long, J. (1997). *Regressions models for categorical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Sage: Thousand Oaks, CA.
- Long, J., & Freese, J. (2014). *Regression models for categorical dependent variables using Stata* (3rd ed.). College Station, TX: Stata Press.
- Lowi, T. (1964). American business, public policy, case-studies, and political theory. *World Politics*, 16: 677-715.
- Mason, L. (2015). "I Disrespectfully Agree":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tisan sorting on social and issue polariz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9: 128-145.
- Mayhew, D.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 Miller, A.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 951-972.
- Miller Center of Public Affairs. (2019). George W. Bush. University of Virginia. <https://millercenter.org/president/gwbush>.에서 2019. 4. 20 인출.
- Patterson, J. T. (1996). *Grand Expectations: 1945-197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atterson, J. T. (2005). *Restless Giant: the United States from Watergate to Bush v. Go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opp, E., & Rudolph, T. (2011). A tale of two ideologies: Explaining public support for

- economic interven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73(3): 808-820.
- Rudolph, T., & Evans, J.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 660-671.
- Rudolph, T. (2009).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tax cuts. *Public Opinion Quarterly*, 73: 144-158.
- Rudolph, T., & Popp, E. (2009). Bringing the ideological divide: Trust and support for Social Security privatization. *Political Behavior*, 31: 331-351.
- Williams, R. (2010). Fitting heterogeneous choice models with oglm. *The Stata Journal*, 10(4): 540-567.
- Williams, R. (2016).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generalized ordered logit models. *The Journal of Mathematical Sociology*, 40: 7-20.
- Wolfe, R. (1997). OMODEL: Stata modules to perform tests on ordered probit and ordered logit models. *Statistical Software Components S320901*. Boston College Department of Economics.

부록: 설문 구성

종속변수

정부의 복지개입 지지

- 귀하는 다음 각 의견 중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깝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표시해 주십시오.
- 1에 가까우면 “정부가 복지에 더 책임을 져야한다”, 10에 가까우면 “자신이 각자의 생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 역코딩하여 10에 가까우면 정부의 복지개입에 대한 지지가 커지도록 변수를 구성하였음
- 1~10점 척도를, 1~5점 척도로 코딩하였음

설명변수

정치적 이념

-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에 가까우면 매우 진보적, 5에 가까우면 매우 보수적
- 1과 2는 진보주의자로, 4와 5는 보수주의자로 더미변수를 구성함
- 3인 중도주의자(더미변수)는 모형에서 제외되었음

정치신뢰

-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기관들입니다. 귀하는 이 기관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총 5개의 주요 사회기관의 척도는 1~3임(5개의 주요기관은 중앙정부 부처, 지방 자치 정부, 국회, 대법원, 청와대임)
- 총 5개의 주요 사회기관에 대한 반응을 합산하여 5로 나눔
- 개별 기관에 대한 척도는 역코딩하여, 3은 “매우 신뢰”로 1은 “거의 신뢰하지 않음”으로 변수 구성

진보주의자 x 정치신뢰

- 진보주의자와 정치신뢰의 상호작용항

보수주의자 x 정치신뢰

- 보수주의자와 정치신뢰의 상호작용항

통제변수

지지정당

- 귀하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 변수구성: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통합진보당, 4) 진보정의당, 68) 기타 77)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 1을 지지하면 보수정당으로, 2~4를 지지하면 진보정당으로 변수를 구성함

연령

- 연령의 범위는 18~83세까지임

여성

- 여성인 경우는 1, 남성인 경우는 0으로 더미 변수 구성

수입

- 이 직업에서 근로소득은 대략 월평균 얼마입니까? 세금공제 이전의 액수로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 등의 경우에는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서 기입할 것)
- 소득구간의 범위는 0~21까지임

교육수준

-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학(2~3년제) 5) 대학교(4년제) 6) 대학원(석사과정) 7) 대학원(박사과정)
- 교육수준의 범위는 0~7까지임

사회신뢰

-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믿을 수 없다”에 0점을 주고, “매우 믿을 수 있다”에 10점을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 범위는 0~10임

ABSTRACT

Implications of Political Trust for the Support for Governmental Intervention in Welfare Policies in Korea

Jae-Young Lim & Kuk-Kyoung Moon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ideology and support for welfare programs. More importantly, the article points to political trust as a heuristic device to moderate conservatives' antagonism toward welfare programs. Using the 2014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the article identified that conservatives show antagonism toward welfare programs. However, conservatives become more supportive of welfare programs when moderated by political trust. The results imply that political actors, particularly progressive political actors need to work hard to improve the public's trust in polit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push for welfare programs.

【Keywords: Welfare Programs, Partisanship, Ideology, Ideological Risks, Political Trust】